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거짓 정보로 탈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핵산업계의 거짓 정보에 강력 대응 예정, 국민의 참여로 탈핵정책 만들어야
한수원 등 핵산업계 대국민 홍보 즉각 중단해야

7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탈핵실현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 폐쇄 기념사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첫걸음” 선언하며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 연장금지, △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에 마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이외에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탈핵로드맵 수립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핵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전문가들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론화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은 정부의 공론화 계획과 탈핵에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점을 은폐하면서 비용 문제를 부풀리거나 탈핵정책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한수원은 아직도 방송과 지하철·철도에서 핵발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이제 겨우 시작한 탈핵정책을 가로막는 행위들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원자력계와 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이를 하루빨리 바로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탈핵실현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주요 내용

- 핵산업계, 원자력학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비판
- 일부 언론의 찬핵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과 공정보도 촉구
- 향후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적극적 탈핵정책 추진 촉구
- 선언문 낭독

2017. 7. 12.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표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프,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선언문, 민연련의 언론 분석 자료 첨부>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02-702-4979 / 010-2240-1614)>

거짓 정보로 탈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 연장금지, △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에 마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과 이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이외에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탈핵로드맵 수립 등 탈핵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에너지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울산-경주 지진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몸으로 느껴왔고, 정치권은 이에 화답하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 협약을 통해 약속한 다른 탈핵의제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올해 하반기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단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들이 주로 만들어왔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은 그동안 은폐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핵산업계와 일부 언론의 형태를 보면 이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비전문가들의 여론몰이 정도로 폄하하는가 하면,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점을 은폐하면서 비용 문제를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그간 한수원 비리와 각종 사고 은폐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원자력계는 그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핵발전의 필요성을 강권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한수원도 마찬가지이다. 한수원은 아직도 방송과 지하철·철도에서 핵발전의 안전성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이제 겨우 시작한 탈핵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탈핵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핵산업계와 원자력학계, 일부 언론이 뚝뚝 뭉쳐 정부의 탈핵정책을 가로 막으려는 것이다. 거짓 정보로 결코 탈핵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 정책은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은 단지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산업계와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탈핵정책은 이미 큰 강의 물줄기가 되어 도도히 흐르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원자력계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일부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 유포에 단호히 대처하며, 제대로 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인 토론,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그간 은폐되었던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 정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7. 12.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표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프,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원전’ 폄훼하는 언론의 행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전전긍긍하는 조중동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한다며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홍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1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회 가동 예상 기간은 3개월이지만 기한을 더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개 일간지는 28일 해당 사안을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논조는 크게 달랐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공사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산업 경쟁력 약화, 주민·업계 반발 여론,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부족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찬성 여론을 부각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특히 한겨레의 경우 이번 탈핵논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질문 하나. 소요·손실 비용을 제목에 명시했는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 원이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총 손실은 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손실비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은 매체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관련 보도 속 ‘비용’ 관련 언급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중단>(6/28 고영득 기자 <https://goo.gl/K6vQGY>)에서의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 제목에 모두 공사에 투입된 비용 혹은 추산 총 손실액을 명시했는데요. 동아일보의 <**2조6000억** 들인 신고리원전 공사

‘스톱’>과 조선일보의 <1조6000억 들인 원전 공사 잠정중단>은 모두 1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의 <1조6000억 투입해놓고 ...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계 물어>는 2면 머리기사입니다.

2조6000억 들인 신고리原電 공사 ‘스톱’

(공사비 + 주민 보상비)

공정 29% 신고리 5·6호기 잠정중단 계획은 세운 뒤 8년여의 준비를 거쳐 공사비 1조6000억 원과 주민 보상비용 1조 원 등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추진되던 ‘국가 서 브리핑을 열어’문 대통령에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에 대한 공 고, 배심원단은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 합지를 최종 결정한다. 공론화위의 활동 기간 은 최장 3개월이다.

1조6000억 들인 原電 공사 잠정중단

(신고리 5·6호기)

정부 “3개월 공론화 과정 거쳐 건설 재개 여부 결론”
이미 공정 29%인데... 시민배심원단 구성해 결정키로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현황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원리

용량 : 2800MW

으로 조사할지 결정한다. 이후 TV 토론회 등을 거치고, 일정 규모 시민배심원단을 마련해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고 투명한 기치를 가지고 참 딴 공

1조6000억 투입해놓고 ...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계 물어

△ 공사에 투입된 비용 부각해 보도한 조중동(6/28)

특히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6/28 이위재·김성민 기자 <https://goo.gl/ea3RyY>)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 상생 지원금 집행 중단 1500억원, 지역 건설 경기 악화와 민원 발생 비용 2700억원, 법정 지원금 중단 1조원,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 등 총 6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제목이 아닌 기사 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질문 둘. 종합공정률과 별개로 실제 시공률 수준을 말했는가

신고리 5·6호기의 5월말 현재 종합공정률은 28.8%이지만, 실제 시공률은 10.4% 수준인데요. 기사 내에서 실제 시공률을 언급한 매체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뿐입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어떤 결정도 저항 불보듯... 공론화로 돌파구>(6/28 고영득 기자 <https://goo.gl/q4RNDU>)에서 “한수원이 밝힌 종합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8%다. 설계는 80%, 기자재 구매는 55% 이뤄졌으나 시공률은 10%에 그친다”고 전하며 ‘아직 얼마 진행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일보는 <논란 불지핀‘ 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춤’>(6/28 이동현 기자 <https://goo.gl/EevCeF>)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시공률 10.4%)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1조6,000억원)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발언을 전달한 뒤 그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시인했다”고 덧붙이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일보도 관련 사진기사 제목을 <현재 공정률 28%>로 뽑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시민들이 결정한다>(6/28 정인환 기자 <https://goo.gl/yqHvft>)에서 “정부는 우선 5월말 현재 종합공정률이 28.8%(실제 시공률 10.4%)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완전 중단(백지화)될 경우 총손실 규모(매몰 비용)가 이미 집행된 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질문 셋. 전기요금 상승 문제를 언급했는가

탈핵 관련 논의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 ‘전기요금 폭등 우려’를 전한 곳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원전 공사 중단 말고 脫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6/28 <https://goo.gl/N5VrMa>)에서 “최근 5년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kWh당 원자력 53원, 석탄 66원, LNG 142원이었다.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1조6000억 투입해놓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계 물어>(6/28 이승호·장원석 기자 <https://goo.gl/LHnYMk>)를 통해 “실제 원전 폐기로 갔던 일본의 경우도 **전기 요금 급상승**에 따라 최근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일본의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미 건설된 모든 핵발전소를 하루아침에 가동중단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일 뿐입니다. 또 미래 전기요금 추정치는 이를 시도하는 각 단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정부 발표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추정한 JTBC의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확인해보니>(6/20 <https://goo.gl/Su1Juy>) 보도에 따르면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8367원 수준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무작정 ‘폭등’ ‘굉장히 비싸질 것’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는 것은 필요이상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넷. 원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업계 피해를 부각했는가

정부의 탈핵 기조가 원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 업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는 주장을 부각해 전달한 곳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문정부 ‘탈핵 드라이브’... 비전문가 손에 결정 맡겨 논란>(6/28 이견혁·최혜령·강성휘 기자 <https://goo.gl/m3Mz44>)에서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원전 건설이 중단 되면 기술 유지와 수출을 위한 시험 가동이 어려워진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뒤 원자력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원전 공사 중단 말고 탈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6/28 <https://goo.gl/N5VrMa>)에서 “원전 신규 건설이 중단되면 기술 생태계와 납품 업체망이 순식간에 붕괴되고 대학의 원자력 기술 인력 양성도 대(代)가 끊기게 된다. 한번 기술 낙오 국가가 되면 5년 뒤 다음 정부가 원전 재개로 정책을 선회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아예 관련 업체의 한탄을 별도의 기사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했더니...” 한숨 쉬는 중기들>(6/28 전영선 기자 <https://goo.gl/B5EQ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에 가속이 붙으면서 우리기술처럼 원자력 산업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은 술렁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원전 업체들 “정부 어떻게 믿고 일하겠냐”>(6/28 임소형 기자 <https://goo.gl/nJKbka>)에서 “최종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공기업인 한수원은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520억원 어치의 부품을 납품했다는 한 중소기업 부사장의 “정부와 한수원이 계약해놓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질문 다섯. 여론은 어떻게 전달했는가

주민 여론을 별도의 기사로 부각해 전달한 곳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입니다. 이 중 동아일보는 <원전 유지한 주민들 “누구를 위한 중단인가” 항의>(6/28 정재락 기자 <https://goo.gl/8gQjXp>)를 통해 원전 유지에 찬성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각해 전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주민들 “공론화는 정부 여론몰이” 환경단체 “공약 이행 환영”>(6/28 위성욱 기자 <https://goo.gl/zYXEbe>)에서 원전 유지에 찬성했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갈리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대통령이 우리 편지에 화답” 모처럼 웃은 밀양>(6/28 신동명·최상원·김영동 기자 <https://goo.gl/2jXNvV>)를 통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12년째 싸우고 있는 경남 밀양 주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별도의 기사로 여론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기사 내 서술을 통해 어느 단위의 주장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경향신문의 경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특별히 전달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들은 뒤늦게라도 공사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의 입장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6/28 이위재 김성민 기자 <https://goo.gl/ea3RyY>)에서 “환경단체 등은 ‘건설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지만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이 만든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 대책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며 대결 구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논란 불지핀 ‘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춤’>(6/28 이동현 기자 <https://goo.gl/EevCeF>)에서 환경단체 등의 환영 입장은 “이날 공사중단 방침에 환영의사를 표시했다”고 전달하고, 그 뒤에 곧바로 “하지만 원전건설을 통해 지역개발을 희망했던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과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 및 원자력학계 등에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반발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질문 여섯.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에 직접 우려를 표하거나, 관련 여론을 전달했는가
시민배심원단의 비전문성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입니다. 이 세 매체는 아예 관련 보도 제목에 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文정부 ‘脫核 드라이브’... **非전문가** 손에 결정 맡겨 논란>,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 중앙일보는 <1조6000억 투입해 놓고 ...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계 물어>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단순히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통해 “이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돼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민 배심원’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나. 국민참여재판처럼 할 일이 아니다. 중대한 국가사안을 멋부리듯 다루지 말라”는 주장을 직접 펼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시민배심원단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한겨레는 <시민 직접 참여로 ‘탈핵논쟁’ 결론...“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6/28 김성환 기자 <https://goo.gl/gF8tJX>)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바탕이 되어야 공론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쟁을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배심원단 제도에 대한 호의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 <논란 불지핀 ‘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춤’>(6/28 이동현 기자

<https://goo.gl/EevCeF>)에서 “최종 결정을 정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전했는데요. 조중동과는 달리 시민배심원단의 비전문성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직접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일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사회적 반발을 소개했는가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보도량	2건	4건	5건	4건	4건	2건
소요손실 비용을 제목에 명시했는가	X	○	○	○	X	X
전기 요금 상승 문제를 언급했는가	X	X	○	○	X	X
원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는가	X	○	○	○	X	X
원전 관련 업체의 주장만을 담은 별도의 기사가 있는가	X	X	X	○	X	○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에 직접 우려를 표하거나, 관련 여론을 전달했는가	X	○	○	○	X	X
종합공정률과 별개로 실제 시공률이 10%수준임을 말했는가	○	X	X	X	○	○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사회적 반발을 소개했는가	○	X	X	X	○	X

△ 6개 일간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사안별 보도 양상 비교(6/28)

©민주언론시민연합

신고리 5·6호기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위험지역 세계 최대 인구 밀집지역’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결과가 은폐, 폐기된 사실과 핵발전소 지진재해위험 평가 축소, 왜곡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이 같은 ‘신고리 5·6호기의 이력’을 언급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6월 2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신재생에너지’ 때리는 TV조선

‘탈원전 정책 피해’만 부각한 TV조선

TV조선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6월 27일부터 매일 ‘신재생에너지의 허와 실’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1건씩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만 ‘타겟’으로 잡아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깎아내리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 에너지의 위험성과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은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 TV조선 <갈 길 먼 풍력발전…효율성도 의문>(7/3 <http://bit.ly/2tfoZ8e>)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기후적, 지리적 악조건에 주민들의 반발, 막대한 비용이 문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TV조선이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길.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풍력발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창기 기자는 전북 부안군 위도에 건설 중인 해상 풍력 단지를 보여주면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 반대로 착공이 6년 늦어졌는데도 주민 반발은 계속 돼 완공은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고기잡이 못하죠. 생계를 위협하는 것 아니요”, “이의 제기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주민 인터뷰도 2개 덧붙였습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의 풍력 발전기 건설 현장도 비추면서 “산 능선이 허허벌판이 돼 버렸고, 잘려버린 나무들은 곳곳에 널부러져 있”다고 ‘환경 파괴’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반발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소요될 예산 86조 원도 부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국민과의 교감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전반에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보도를 낸 방송사는 KBS·MBC·TV조선입니다. 이중 MBC <풍력의 ‘역풍’…저주파 소음 ‘골치’>(7/3 <http://bit.ly/2tHk0hV>)는 TV조선과 매우 비슷한 보도입니다. MBC는 TV조선과 약속이나 한 듯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까지 늘리기로 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풍력 발전소도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풍력 발전의 폐해’만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MBC가 제기한 문제점은 소음입니다. MBC는 “발전소는 늘고 있지만 소음 대책은 손을 놓으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도리어 또 다른 환경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민 피해 해법 찾아야 하지만 ‘탈원전’은 다른 차원의 문제

MBC와 TV조선은 입을 모아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로 꼽히는 풍력 발전의 폐해를 강조



△ 풍력발전 피해 여론으로 탈원전 정책에 문제제기한 TV조선(7/3) 했는데요. 두 방송사 모두 풍력 발전에 의한 주민 피해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결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V조선은 ‘전기요금은 폭증할 것’이라고 결론지

었고 MBC는 ‘또 다른 환경 공해를 유발한다’고 비판했죠. 물론 풍력 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적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하고 27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탈원전’의 첫걸음을 뗐지만 ‘탈원전’은 대선 이전부터 각계각층이 공감한 의제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탈원전에 유보적 입장을 내놨을 뿐 나머지 4명의 주요 주자는 모두 ‘탈원전 공약’을 내놓았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을 보유한 동시에 원전 밀집도 역시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원전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주는 인구 밀도까지 높아 원전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진도 5.0의 강진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도 지진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죠. 이외에도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처리 방법이 없어 우리 국민은 항상 방사능 물질 유출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 일찌감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MBC·TV조선 ‘풍력발전 폐해’ VS KBS ‘탈원전, 장기적으론 효과’

TV조선이 전기 요금 상승을 위험 요소로 들었지만 이것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1998년 탈핵 선언 이후 10년 사이 전기 요금이 두 배 가량 올랐지만 실제로 각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개선됐고 국민적인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TV조선과 MBC가 유독 풍력 발전만 지목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탈원전 정책’은 풍력 발전 뿐 아니라, LNG발전,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산업을 포괄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신산업 육성,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산업적으로도 탈원전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과 MBC가 탈원전 정책의 단기적 문제점을 짚고 싶었다면 정책 도입의 전반적 취지와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어야 합니다.

같은 날 탈원전 관련 보도를 낸 KBS는 <독 원전 대신 신재생…단기 ‘부담’ 장기 ‘긍정’>(7/3 <http://bit.ly/2ulsodD>)이라는 보도에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해 전기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부담이 생겼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면 수급에 균형을 맞추기가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지난 2015년까지 33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등 장기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찬핵단체’를 ‘환경단체’로 둔갑시킨 TV조선

.....
지난달 27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을 공론화 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이어 발 빠르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이 선두 주자입니다. TV조선은 지난 7월 3일에도 TV조선 <갈 길 먼 풍력발전…효율성도 의문>(7/3 <http://bit.ly/2tfoZ8e>)에서 풍력 발전의 효율성이 문제라며 ‘탈원전’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6일에도 TV조선은 ‘탈원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환경보호운동가’도 ‘탈원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TV조선이 인용한 ‘환경보호운동가’와 ‘환경단체’는 ‘찬핵단체’라 해도 손색없는 수준입니다.

미국 환경단체도 ‘탈원전 반대’? 보도의 시작은 ‘조선비즈’

TV조선 <미 환경단체가 “탈원전 재고”…왜?>(7/6 장용욱 기자 <http://bit.ly/2tXZlqi>)에서 전원책 앵커는 “원자력발전은 값싼 청정에너지다. 한국마저 원전에서 손을 떼면 앞으로 세계원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과학자와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용욱 기자는 “미국 타임지가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쉘렌버거 대표” 등 “미국의 유명한 교수와 환경운동가 27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 “원전을 없애면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 환경이 오히려 더 파괴될 것”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발전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우려하지만, 원자력은 에너지를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말하는 장면도 녹취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간 9만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습니다.



△ TV조선 <종합뉴스>(7/6) 화면 갈무리
TV조선이 대대적으로 인용한 ‘미국 과학자들과 환경보호운동가들의 편지’는 7월 5일 조선비즈에서 먼저 단독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조선비즈 <美과학자·환경단체 13인 文대통령에 "탈원전 재고해달라" 공개서한 전달>(7/5 <http://bit.ly/2swaZ7n>)이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하자 곧바로 연합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고(연합뉴스 <미국 환경단체, 文대통령에 "탈원전 재고해달라" 서한>(7/5 <http://bit.ly/2sNh0z7>)) 하루 뒤인 6일,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MBN 등 많은 매체들이 받아췄습니다. TV조선도 그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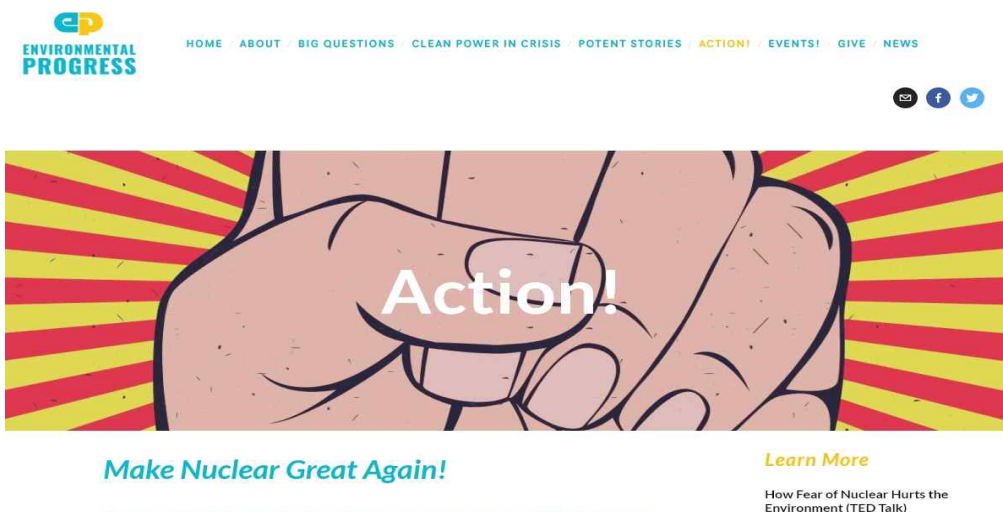
‘환경발전’이 ‘환경단체’? 홈페이지지만 봐도 ‘찬핵단체’

TV조선 등 많은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인용한 미국 환경단체는 “환경발전(<http://www.environmentalprogress.org/>)”이라는 단체입니다. 이곳의 대표인 마이클 쉘렌버거 역시 ‘환경보호운동가’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이 단체가 일반적인 환경단체와는 거리가 멀고, ‘찬핵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

다.

먼저 이 단체의 대표 마이클 쉐렌버거는 2013년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친 환경으로 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원자력으로>라는 글에서, 태양광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 독일과 원자력 발전에 투자한 핀란드를 비교하며 원자력 발전이 4배 정도 더 저렴하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장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발전’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도 일관적으로 같은 주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환경발전’은 애초에 핵에너지를 ‘clean power’ 또는 ‘clean energy’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핵 에너지가 깨끗한 ‘청정’ 에너지라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위기의 청정에너지’라는 페이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독일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탈원전 국가’들을 부실한 근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도입한 결과 배기가스 배출이 증가했다”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핵에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로지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만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환경발전’이 스스로 지닌 핵심적 문제의식들을 정리한 ‘Big Questions’라는 페이지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들은 ‘핵폐기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핵 폐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핵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



△ ‘환경발전’ 단체 홈페이지 일부 갈무리

다 △우라늄 연료봉은 크기가 작으며,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2011년 전 세계를 경악케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보더라도 핵폐기물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수많은 인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처리 방법이 없어 인근 주민들은 항시 방사능 물질 유출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발전’은 이런 문제점들을 은근슬쩍 은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발전’의 활동을 소개한 ‘action’이라는 페이지를 보면 환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핵에너지를 다시 일으키자’, ‘청정에너지(핵에너지를 의미)를 보호하자!’ 등 선동적 구호로만 가득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지닌 단체를 과연 언론이 ‘환경단체’라고 소개해도 되는지, 그 대표를 ‘환경보호운동가’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유수의 환경단체는 모두 ‘반핵’, 언론은 왜 ‘환경발전’을 띄우나

‘환경발전’은 정작 발전량 대 비용으로만 환산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발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을 줄이자 배기가스 배출이 늘어났다’는 증명되지 않은 수치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핵에너지가 상시적으로 품고 있는 방사능 물질의 치명적 위험성과 핵폐기물의 영구적 위험성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유수의 환경단체들과 상당히 다른 입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시에라클럽, 그린피스, 지구의 벗, 세계 자연 기금(WWF)등 환경단체들은 일관적으로 핵에너지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환경발전’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환경발전’이 오로지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만을 공격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는 바이오에너지와 수력 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신재생에너지가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은 정반대로 ‘탈원전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죠. 또한 하나의 원전을 폐로하는데 최소한 20년이 걸리는 만큼 ‘탈원전’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당장의 비용만으로 원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환경발전’을 환경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발전’과 그 대표의 주장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쓴 우리 언론들의 태도 역시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합리적인 토론을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찬핵단체’를 ‘환경단체’로 포장하여 받아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끝>